

		<b>보 도 자 료</b>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1년 3월 8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대면인실	담 당 자	• 공보지원협력관 신상학 ☎440-3318	
	정책기획관실	담 당 자	• 기획담당 양상훈 ☎440-2131 • 담당자 황선조 ☎440-2135	
<b>보 도 시 점</b>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춘 시장 “4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및 자체 추가지원 검토 주문”

- 8일 실·국장회의 열고 민생경제 지원 및 코로나19방역·백신접종 집중점검 -  
- 3월 업무계획 점검 및 아동학대 관련 기관 합동 점검체계 주문 -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과 함께 인천형 맞춤형 민생지원 방안에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 박 시장은 8일 ‘3월 실·국장회의(비대면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더불어 실·국별로 특별히 더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촘촘히 조사해 추가적인 민생지원 방안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백신과 관련된 정보와 우려들을 시민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 박 시장은 “여전히 시민들께서 백신에 대한 정보와 접종일정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우리시가 보완하는 역할을 잘 했듯이,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을 제대로 알리고 시민들이 의문과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실국이 협력하여 코로나 백신 관련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박 시장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박 시장은 “작년 10월에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이후 제2의 정인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우리 스스로 그동안 마련했던 대책이 한계가 있었음을, 사회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음을, 우리 지역사회가 학대아동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 시장은 “예산과 조직, 코로나19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 민과 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여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 “그 시작은 교육청, 경찰, 아동전문기관, 군·구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기존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일 것”이라며, “기관 간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 주관으로 교육청과 경찰, 관련 전문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가동시켜주기 바라며, 점검·활동 상황을 시장과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 시장은 “등교수업 개시에 따른 학교 점검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신고와 감시도 강화하고, 3월말 시행되는 학대피해 아동 즉각분리 제도는 물론,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자치경찰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